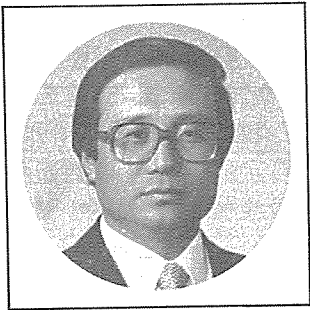


科學技術과 政党的 역할

“發展的 정책개발 및 支援기능 강화를...”



李 台 燮  
(國會議員 · 前科技處長官)

현대생활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은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간에 교통수단, 농업기계, 산업재해, 대기오염, 가정의 생활용품 등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안보 및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구 산업의 융성과 쇠퇴와 같이 정치인 및 정치집단의 이해 관계와도 크게 얽혀 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인사들과 국내 정치인간의 대화에서도 과학기술 문제가 자주 거론될 만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 문제가 그 실제적인 영향력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비중있고 또 밀도있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본다. 즉 과학기술발전이 정치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정책문제화 과정”과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 문제가 구체적인 정책토의의 의제로 전화되어 정책결정의 대상으로 선택 되어 가는 “정책의제 채택과정”이 국회나 정당내에서는 빈약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스웨덴이나 서독에서는 원자력정책이 중대한

정치상의 쟁점이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대에 달 착륙」을 내세웠고, 닉슨 대통령은 「암의 정복」을,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방위계획(SDI)」을 정책문제화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과학교육의 질 및 대학의 연구설비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현재 과학기술계와 행정부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범국가적 연구개발계획(natoinal R & D system)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각 정당은, 또 국회는 어떠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당인 민정당이나 세 야당은 각각 과학기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특색이 있으며 실천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당의 정책개발 기능, 즉 정당이 사회 각 계층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과학기술발전과 관련된 제반 이익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각 정당의 이념과 연결시켜 각

정당의 독특하고도 실천적인 정책대안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염려되는 점은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측면과 분배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그 결과 정부의 복지관계 예산이 증가함과 더불어 과학기술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물론 사회복지문제는 중요한 과제이고 또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정부예산안의 제약으로 인하여 마치 과학기술부문이 복지부문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의 자생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여러 당면 과제중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 우리나라 정당에서 과학기술의 비중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책에서도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라 할 수 있으며 비공식인 참여자로는 이익집단, 정당, 일반국민 그리고 언론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와 이익집단인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언론에서 과학기술문제를 비교적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가 지난 20여년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수립, 과학기술정책수단개발 등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상공부, 체신부, 동자부 등 유관부처들도 과학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각 부처의 역점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과학기술문제는 이제 범부처적으로 정책의제화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익집단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교수 집단, 민간기업의 과학기술자 집단, 각종 학회등 과학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중심이 된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몇가지 주요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만큼 그 활약이 두드러지지만, 공공연하게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타 집단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와 주장을 표명하거나, 또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의 경우 특히 1980년대에 과학기술문제를 매우 활발하게 다루어 국내의 과학기술발전동향 정보제공, 정부정책의 비평 및 정책대안의 제시 등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이해증진이 크게 이루어진 것도 언론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의 지대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법부의 경우, 법령해석과 사법심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내용과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해보상 등 판결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정책형성에 단순한 법률적 자문뿐 아니라 위헌판결 등을 통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성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은 과학기술발전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원자력 반대단체, 환경보호 단체 등의 결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는 적다고 본다.

이상에서 몇몇 우리나라의 중요 집단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초점을 정치집단으로 돌려 보기로 한다.

정당의 경우, 우리나라 정당들은 각 당 공히 정당정책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내세우고 있다. 각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민정당은 6번째 강령에서, 평민당은 기본정책의 뒷부분에서, 민주

과학기술진흥 기술입국

당은 마지막인 10번째 강령으로 공화당은 7번째 강령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당은 기본정책에서 다시 과학기술의 진흥을 주창하고 있다. 즉 각 당 공히 과학기술의 진흥을 제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각 당이 과학기술정책에서 어떠한 특징과 방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당이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제도를 보면 여당인 민정당이나 세 야당 모두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과학기술문제를 다루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각 당에서 경제과학전문위원이나 또 각 분과의 전문위원들이 과학기술을 다루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전담의 성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나 자문을 얻을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과의 공식적인 회합을 통하여 의문나는 점들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정기적이고 비체계적인 활동이 현 정치권에서 주류를 이루는 활동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공정책은 무계획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이고, 또 정책의 형성뿐 아니라 정책의 집행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적극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사조적이 갖지 못하는 권위성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학기술은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이나 이념의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비교적 소홀하지 않았던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정당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그 활동이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또한 경제과학분과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하여, 또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상의 문제점이나 제약요인이 검토되고 있고, 관계 법률의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와 같이 특정주제, 예를 들면 국제경쟁력 강화나 연구개발투자의 적정수준 문제같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주제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정책대응을 논하는 지속적인 국회차원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회내에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 이래 의회에서 기술혁신정책이 매우 심도있게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8년 NASA가 생기자마자 곧이어 하원에 “과학항공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원에는 “과학우주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업무도 구분하여 전자는 우주프로그램과 국가과학기금을 관할하고 후자는 NASA와 항공우주업무를 관할하는 등 행정부의 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한 바 있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과학기술관계소위원회가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55년 중의원에 “과학기술진흥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제제건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물론 국가마다 정치문화와 정책결정의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차원에서 과학기술 문제를 좀 더 밀도있게 다루어야 하는 점은 명료하다.

1987년 서울대학교와 사회과학연구소가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연구”의 내용 중 정당이 과학기술정책을 어느만큼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 정당은 뚜렷한 과학기술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민정당의 경우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과학자 314명중 16%, 기술자 229명중 26%, 기업인 108명중 40%로 나타나 있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과학자 46%, 기술자 39%, 기업인 19%이었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류문화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에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던 과학기술은 이제 새로운 국면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컴퓨터와 반도체 등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발전은 인공지능에의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공학의 발전은 생명현상을 공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하였으며, 각종 신소재의 출현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우주와 심해저까지 확장시킬 전망이다.

또 민주당(조사 당시에는 통일민주당으로 단 일화 되었었음)의 경우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과학자 2.3%, 기술자 12%, 기업인 7%이었고,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과학자 52%, 기술자 42%, 기업인 30%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조사의 대상자인 일반국민도 위에서 조사된 퍼센트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민정당의 과학기술정책을 야당보다는 더 인식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 이상의 국민들이 여·야 정당이 뚜렷한 과학기술정책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서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부 중심시대”에서 막강한 정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부와 선의의 정책개발경쟁을 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투자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 과학기술과 정치와의 연계성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류문화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에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던 과학기술은 이제 새로운 국면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컴퓨터와 반도체 등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발전은 인공지능에의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공학의 발전은 생명현상을 공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하였으며, 각종 신소재의 출현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우주와 심해저까지 확장시킬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기술혁명」은 2세기 전의 산업혁명에 비견되고 있으며, 현재의 산

업사회를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로 변모시켜 과학기술이 경제사회구조의 중심이 되는 「기술과 두뇌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의 과정에서 「과학에 바탕을 둔 기술(Science-based Technology)」과 「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Technology-based Innovation)」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는 「고도의 과학기술국가」를 성취하여 당당하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2000년대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특히 이를 위한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방향에서 과학기술투자는 최소한도 GNP의 3% 이상이 될 것이다. 이미 1986년에 과학기술투자는 GNP의 2%에 이르렀고, 90년대 초반에는 선진국중 선도 국가들의 수준인 GNP의 3%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기처를 중심으로 2000년까지 GNP의 5%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주창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권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 보자.

첫째, 정치권의 관심사가 힘(power)에 있다면 과학기술은 그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전쟁시에도 또 평화시에도 과학기술은 힘을 구현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제2차세계대전 시의 레이더의 발견이나 독일 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원자폭탄은 다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선진국

수녀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일본의 첨단기술 때문이며, 정치인들간에도 날씨가 건강이야기가 아니라 반도체 칩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인 힘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정학적으로 또 제3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돌출구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스웨덴 등과 같은 준 중심국가(sub-core country)로 분류할 때,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만이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세계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활발한 북방정책이나 대 개도국진출 문제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고, 국제적으로 그 가치가 입증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첨병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세째,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과학기술은 정치인 개개인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정책이 정당간에 쟁점이 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는 SDI가 양당간에 선거쟁점이 되고 있다. 또 미국의 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쟁점의 하나는 과학기술개발체제의 중앙집권화나 지방분권화나 문제로서, 그 이면에는 각 주 출신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기출신지역구에 기술집적도시(technopolis)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의원들간에 매우 치열한 것으로 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문제가 정치인의 이해와 한층 더 직결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조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발전이 정치인의 이해에 직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과학기술에의 관심도 증진과 지원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네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정치집단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유용성 즉, 과학기술이 국가목표의 달성에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물론 20세기에 들어와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나 제2차 세계대전시의 일본이나 미국의 범국가적인 과학기술의 동원체제를 구축한 사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선진국에서도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즉, 정치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집단들의 돌출구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편애에서 기인된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경제·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집단의 지속적인 지원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통치권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치집단의 적극적인 지원은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할 수도 있으나, 선진권에의 조기진입이라는 국가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향후에도 계속되어야만 함은 당연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제와 책임의 기능을 정치권에서 담당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영향력도 크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은 흉기로 변할 수가 있다. 대체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공학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그 방향을 점검하는 책임을 국민을 대변하여 정치권이 맡아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자는 사회경제적인 기여나 효과 측면보다는 자신들의 지적호기심이나 독창성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왕왕 있으며, 이를 정치권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진흥과 정당의 역할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와 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당이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직업관료와 전문가집단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정책개발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정당의 정책수립기능에 대한 요구, 즉 국민의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는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또 정당은 행정부와 기본적으로는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행정부 견제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피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한 정당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4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과학기술발전을 촉진, 지원하는 기능이다. 과학기술관계예산은 적절한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지원시책은 충분한가, 과학기술행정체제는 타당한가, 하는 점들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감독·통제하는 기능이다. 선정된 기술개발과제는 그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한 것인가, 사회·경제적 요구와 과학기술발전방향은 일치하고 있는가, 혹은 현재와는 다른 발전의 개념적 틀이나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을 다루는 일이다.

세째,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 내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기능이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개발기능이다.

네째, 관계자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그 의견을 수용·결집하는 기능이다. 과학기술계, 기업인, 노동자, 농민, 소비자단체 등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당에서 과학기술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몇가지 제약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 첫째는 과학기술의 특성에서 오는 제약으로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잘 잡히지 않는 과학기술자의 전유물 같은 그 무엇이라는 점이다. 확실히 과학기술을 논하는 데에는 과학자·기술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광범위한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판단·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상당부분 과학기술자집단내의 의존이 불가피 하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특성인 성과의 불확실성과 장기성 등은 단기간내의 결정을 제약한다. 또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째는 과학기술이 광범위하게 사회 각 부문의 활동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도 과학기술은 다루게 된다. 그 결과 총체적인 과학기술정책과 상공정책, 보건정책, 채신정책 등과 관련된 부문별 과학기술정책은 중복 및 상충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네째는 정당 자신의 정책개발의지와 정책개발을 위한 자체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에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와 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당이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직업관료와 전문가집단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정책개발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정당의 정책수립기능에 대한 요구, 즉 국민의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는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또 정당은 행정부와 기본적으로는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행정부 견제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피할 것이다.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이 우리 정당의 현실이다.

다섯째는 정당내에서 과학기술개발방향이나 우선순위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치인이 대변하는 집단이나 지역구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통일된 의견의 제시에 힘이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당의 과학기술에 대한 활동의 모습을 몇가지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① 과학기술문제를 중요시 한다는 점과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이 과학기술자나 다른 이익집단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즉, 정당을 믿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의뢰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정당내에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추적할 수 있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③ 또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국회의원)개인이 독자적인 정책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과학기술관계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유관기관의 연구 지원을 받게지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개발방향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정당의 철학과는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정책을 개발하되 특정집단의 이익에 편중된 정책보다 국가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발전이 융합된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욕구와 희망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정책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 종래와 같은 과거지향적인 정치적 논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 정책개발을 정당이 리드하는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당이 과학기술정책개발의 중심체로

부각하기 위한 정당 또는 국회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완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현재 보다 개선된 점진적인 방안으로서 이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이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위원회제도를 국회내에 신설하여 각 정당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각 정당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술평가국(OTA)과 같은 광범위한 능력은 어렵더라도, 행정부 등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충분한 만큼의 인력은 갖추어야 소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인력은 정치인들 보다 장기간에 걸쳐 근무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전문가이어야 한다.

둘째, 정당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미지형성을 위한 일련의 행사를 주관하여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관으로서 주체성이 널리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들과의 일련의 간담회, 그리고 일반국민이나 사회 각 계층의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주관하여 행정부와는 구별되는 주체로 알려질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자 집단, 정부관료, 지역구내의 대학이나 연구소, 관련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정당내에 유입되는 정보의 채널을 갖추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구내의 과학기술자와의 연계는 중요하고 또 쉽게 접촉될 수 있다.

네째, 예산확보가 문제되는 경우 미국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Fellows Program제도를 원용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학회 등에서 최신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1~2년간 국회 또는 정당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여, 최신의 정책판단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내에 과학기

일반적으로 과학자는 사물의 진위여부(Is it true?)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사물의 이면(Why did you say it?)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 곧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것이고, 의문을 품는 즉시 자신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그들의 이념 구현을 위한 색깔있는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타 정당과 대비되고 구별되는 과학기술정책을 갖게 될 것이다.

술진흥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 및 정당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이것이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문제에 전문성을 갖거나 그 발전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국회내에 비공식적인 소규모의 '과학기술연구위원회'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가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향후 과학기술과 정치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정치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언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을 현업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로 구성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맺 음 말

우리는 2000년대에 선진사회구현이라는 국가발전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86년에 2000년대의 기술선진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아울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현안으로서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제기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설치 여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대표가 참여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여부, 정부예산의 일정률을 과학기술에 할당하는 문제, 종합적인 대안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정당의 정책개발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정당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는데 가장 민감한 정당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관계집단이 정당의 문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정치와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몇가지 들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투자가 국방예산이나 문교예산의 1/2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집단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지 못했던 점, 또 국회나 정당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인들의 이해와 과학기술개발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며, 또 비록 민간기업이 과학기술의 주역이 되고 있지만 곧 GNP의 3%를 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할 것을 감안할 때, 정치집단이 그 발전방향에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과학기술의 진보가 우리국민에게 흥기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도 정치집단의 의무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과학기술은 정치인들의 관심 가운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며, 이미지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는 사물의 진위여부(Is it true?)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사물의 이면(Why did you say it?)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 곧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것이고, 의문을 품는 즉시 자신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구현을 위한 색깔있는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타 정당과 대비되고 구별되는 과학기술정책을 갖게 될 것이다.